

광주시 자동차 부품 분야 외국인 인력난 숨통 트인다

금형·성형·용접 등 E7-3 비자 시범 운영...100명 중 40명 배정
철강 관세 등 고충 겪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될 듯

광주시가 금형·성형·용접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기능인력 취업비자(E7-3)’ 시범 사업을 본격화 하면서, 지역 제조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금형·성형·용접 등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에 외국인 기능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취업비자(E7-3)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에서 광주·경북·충북·충남 등 4곳이 이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투입 예정인 100명의 외국인

중 40명이 광주에 배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7년 9월까지이며 2차 연도 인원은 1차 연도 현장 적응도, 이직률, 불법체류율, 산업 안전 준수 등 1차년 실적에 따라 변동될 예정이다.

광주 배정 40명은 금형 설계·가공, 사출·프레스 성형, 구조·차체 용접 등 라인 병목이 잦은 공정에 집중 배치된다. 이를 통해 지역 부품사의 납기 대응력과 양산 품질을 끌어 올리는 직접 효과와 함께 채

용 공백으로 미뤄졌던 자동화·스마트공장 고도화 투자를 앞당기는 간접 효과도 기대된다.

E7-3 비자는 국내 산업 현장 중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에 외국인 기능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 직종의 숙련·기능 인력을 들일 수 있다. 이 비자로 5년 이상 국내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

기존에는 조선업, 항공기, 사육 등 일부 산업에만 적용됐다가 최근 자동차 산업 현장 인력난 심화에 따라 자동차 부품기업 대상으로도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수요조사를 진행해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16곳, 총 122명의 인력 수요를 접수

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해 10~11월 베트남,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기술·역량을 검증하고 12월 중 최종 선발한 40명을 지역 주요 기업에 배치할 예정이다.

시는 자동차 부품기업 확인서 발급과 불법체류 방지, 산업 안전, 한국어·생활 적응 등 지원을 병행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역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지역 경제계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핵심인 금형·성형·용접 분야에 외국인 기능인력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인력이 투입되는 금형, 성형, 용접 분야는 지역 제조업의 뿌리이자

자동차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1차 40명’이라는 제한된 인원이지만 시범사업이 숙련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발 관세 장벽 등으로 지역 부품 업계의 수출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안정적인 인력 확보는 원가 경쟁력을 지키고 산업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투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전남 공동주택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크게 줄어

분쟁조정위도 개점휴업 관리 사각

광주·전남 지역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사이, 공동주택 갈등을 풀어야 할 지방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상 멈춰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경기 광주시을)의원이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만에 광주는 보증 가입이 1410건 줄었고 전남도 501건 감소했다.

미등기 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의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집주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이로써 실제 집주인이 바뀌거나 소유권 문제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으며, 특히 미등기 상태의 신축 또는 대규모 주택 임대 시장에서 필수 제도로 꼽힌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2023년 12월 광주 2963건, 전남 864건에서 2025년 7월 각

각 1553건과 363건으로 감소했다.

분쟁 해결 창구 역시 ‘개점휴업’ 상태다.

지방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025년 7월 기준 지난 5년간 누적 건수가 광주 0건, 전남 1건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전세사기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인해 청년 세대에게 또 한번 큰 상처를 안겨줬다”면서 “국토부는 제2의 청년안심주택 사태 예방을 위해서라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 가입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2일 한국금거래소 한 지점에서 전시된 골드바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금 열풍...은행 골드뱅킹 1조 5000억원 돌파

실버바도 이틀간 연간치 2.5배 팔려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금 관련 상품에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은행 골드뱅킹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을 넘어섰고, 올 들어 골드바 판매액은 이미 작년 연간의 2.7배를 넘겼다. 금 열풍이 은으로 번지면서 실버뱅킹, 실버바 투자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지난 9월 기준(우리은행은 2일) 골드뱅킹 잔액은 1조5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연휴였는데도 지난 9월 말(1조4171억원)과 비교해 959억원 증가했다. 올해 7308억원 늘면서 작년 말(7822억원)의 약 2배 수준이 됐다.

3개 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올해 초 급증해 3월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고, 한동안 횡보하다가 9월 들어 다시 크게 늘면서 1조4000억원을 넘었다.

골드바 판매액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골드바 판매액은 지난 1~2일 134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일평균(영업일 기준) 판매액은 67억원으로, 지난달의 51억원보다도 많다.

올해 골드바 판매액은 4505억원으로 이미 작년

(1654억원)보다 두배 이상 많은 실적을 내고 있다.

최근 금 가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 재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 각종 중앙은행 금 매수세 등이 맞물리면서 급등하고 있다. ‘포모’(FOMO·소의 공포)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상승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주 현물 기준으로 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섰으며, 국내에선 KRX 금시장에서 지난 10일 기준 1kg짜리 금 현물이 1g당 19만97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말보다 56.2% 뚝 수준이며, 지난 1일에는 20만3000원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 인기에 달달아온 관련 상품 판매액도 급증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의 실버바 판매액은 지난달 42억7000만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0억원대를 넘겼다. 이달에도 1~2일 이틀 만에 20억2200만원어치가 팔리는 등 열기가 식maz 않다. 지난해 전체(8억원)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누적 실버바 판매액은 104억5900만원으로 작년 연간의 13배가 넘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은행들 가계대출 총량 연간 목표치 이미 초과

규제 예고...연말 ‘보릿고개’ 우려
“서민 지원책 마련해야” 목소리

정부의 대출 압박 정책에도 일부 시중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총량이 이미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작년과 같은 연말 ‘대출 보릿고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제기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를 초과한 상태다.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표 2조1200억원을 제시했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이미 지난해 말보다 2조3202억원(목표 대비 109%) 늘어났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는 증가액이 3조8246억원(목표 대비 180%)까지 불었다가, 신규 대출은 제한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해 규모를 줄였다.

신한은행 역시 올해 증가액 목표는 1조6375억원이지만 지난달 말 기준 증가액은 이미 1조9668

억원(계획 대비 120%)에 달했다.

다른 은행들의 사정도 빠듯하기는 마찬가지다.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8651억원, KB국민은행은 1조7111억원으로 각각 목표 대비 95%, 85% 수준까지 찼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대출 접수 업무 등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로또복권 (제 1193회)						2등 보너스숫자
6	9	16	19	24	28	17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717,013,508		16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4,508,366		84	
3	5개 숫자일치		1,259,616		3,635	
4	4개 숫자일치		50,000		175,936	
5	3개 숫자일치		5,000		2,782,376	

광주신세계 ‘참치학교 팝업스토어’ 대구신세계가 지난 5월 진행한 참치학교 팝업스토어에서 국내산 참다랑어 해체소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6일까지 본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참치학교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참치와 활어회, 초밥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돈 안 쓰는 노인’은 옛말...노년층 소비 증가율, 젊은층 두배

노동연령층 6.3% 늘 때 12%↑

노년층의 소비 증가율이 젊은 층의 두 배에 이르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년층 소비 총액은 243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26조1000억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노년층 소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6.7%로 역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소비 총액의 70.7%를 차지하는 15~64세 ‘노동연령층’의 소비증가율은 6.3%에 그쳤다. 0~14세 ‘유년층’은 4.3% 증가에 머물렀다.

노년층 소비의 60% 이상은 개인 지출인 민간

소비(150조원)로, 전년 대비 14.9% 늘었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의료 등 공공소비가 아닌, 개인이 직접 지출한 소비를 의미한다.

특히 민간소비 중 의료비 위주의 보건 소비보다 여가, 문화, 외식 등 ‘기타 소비’가 크게 늘었다는 게 국가데이터처의 설명이다.

병원비 외에 삶의 질과 관련한 씬씀이가 확연히 커졌다는 의미다.

노년층은 연금·복지·가족 지원 외에 본인 보유 자산을 토대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소비(243조8000억원)는노동소득(64조6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이 차이에서 발생한 생애 주기상 ‘적자’(179조2000억원)는 공공·민간 이전, 민간 자산재배분

을 통해 메워지고 있다. 이 중 민간 자산재배분은 지난해 49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민간 자산재배분은 이자·임대료 등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뿐 아니라, 저축을 줄이거나 자산을 처분해 소비에 사용하는 금액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노년층이 보유 자산을 소비 재원으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다만 노년층에서도 세대별 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노년층 전체 소비의 59.3%, 민간 자산재배분의 68.5%는 65~74세에 집중됐다.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고 활동성이 높은 ‘젊은 노년층’이 소비와 자산 활용의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연합뉴스

LH 임대사업에 자사 임직원 가족 집 샀다

금품 수수 등 비위·부정 24건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하는 사업에 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정한 사례가 적발됐지만 국토교통부 차원의 별도 감사나 개선 권고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중양 의원(창원 의창구)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총 24건의 비위·부정 사례가 적

발됐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기존 주택을 산 뒤 공공 임대해 투병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LH가 자사 임직원 가족의 소유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3건 확인됐다.

LH는 2021년 10월과 12월, 2022년 8월 공사 직원 가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입한 관련 직원 9명을 징계 처분했다. 처분 결과는 경징계인 경고(3명)·견책(4명)·주의(2명)에 그쳤다.

일부 직원이 중개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

거나 외부 위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청렴 기강을 훼손한 사례도 4건이었다.

2021년 5월 매입임대 직무 관련 중개업체로부터 6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LH 행정 3급 직원은 파면됐으며 위법 행위를 묵인·방조한 다른 행정 3급 직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3년 2월과 12월에는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매입 임대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LH 행정·전문 직원과 전문위원 총 6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8월에도 매입 자산 관리업체 평가 과정에서 외부 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99만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과 향응을 받은 행정 4급 직원이 파면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